

【주제 발표】

녹색기술의 재해석과 지역사회 개발

허 준 (서울교육대학교 강사)

1. 서론 : 환경과 경제성장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 이후 자산을 근본으로 하여 삶을 지향한다는 자본주의는 인류가 채택한 유일의 이데올로기로 그 위력을 더해갔습니다. 돈의 위력은 대단해서 인류가 견지해온 규범과 에토스(ethos)를 바꿔냈고, 존재는 무시되고 소유가 인간의 정체성을 대신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영향은 인간의 사고력을 무력화시키고, 보여 지는 내가 자신이라 생각하게 하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화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 나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마저도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자기 집 차가 어떤 차인지, 아빠 연봉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가 죽고 살고, 어울리는 짝패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돈이라면 안 될게 없을 것 같던 이러한 자본주의의 무한질주가 생각지도 못한 벽에 부딪쳐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자본주의의 뒷덜미를 잡은 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그 예는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천성산 내원암의 여승 지울스님이 금식을 하며 천성산 터널을 반대하였고, 4차례에 15개월 중단된 사이 경제적으로는 대략 2조 5000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새만금 갯벌을 들 수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2001년 새만금 갯벌을 지키고자 212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름으로 그 유명한 미래세대 소송을 냈고 자본으로 추진했던 새만금 개발은 만만치 않은 제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과 경제성장은 그 추진력과 공감대를 상실하게 됐고 개발 이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익과 효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에서 환경은 무시할 수 없는 모든 개발과 성장의 시금석이 됩니다.

일반인들에게 ‘환경’이라는 말은 흔히 ‘생태’ 또는 ‘녹색’으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것은 ‘환경’, ‘생태’, ‘녹색’이라는 단어가 환경 운동하는 시민연합에서도 또 환경을 개발하여 이익을 내려는 집단에서도 똑 같이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위에 언급한 환경파괴의 대표성을 띤 새만금 간척사업공사장에서도 “친환경 기법으로 새만금을 완성하겠습니다” 라는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입장에서 같은 말을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환경’, ‘생태’, ‘녹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오염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환경이라는 말은 쉽게 정의 내려질 수 없고 또 그 쓰임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환경윤리란?

1960년대 이 후 발전한 3대 사회운동으로 여성해방운동, 다윈주의운동, 환경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편견과 사회 시스템에 대항해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났고, 서구문화중심의 편견에서 다윈주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중심의 편향에서 환경운동이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 사회운동은 지금까지 그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유독 환경운동은 특정 지역과 특정 단체에 머물지 않고 그 영향력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위기의 심각성이 우리의 삶과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온실효과, 오존층의 파괴, 삼림의 훼손, 땅의 침식, 종들의 멸종, 대기와 하천의 오염 등은 이미 현세대 뿐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세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환경위기는 지구 어느 한 구석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열대우림의 황폐화가 이상기후를 초래하는 것처럼,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환경의식이란 아주 단순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버린 물을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더럽힌 공기를 우리가 마시며, 우리가 버린 쓰레기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철이 들고 갑자기 너그러워져서 환경을 돌보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간의 생존 때문입니다.

환경이란 말은 17세기 파스칼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환경은 운동하는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단순한 자연 상태에 한정되지 않고 유기체의 생존에 필요한 외적 조건의 총체, 더 나아가 인간과 생물의 의식과 행동에 무언가 작용을 미치는 것입니다. 즉 환경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며 지극히 현실적인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처음 경험한 환경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여유 있게 “자연 그대로의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에게 자연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여름마다 찾아오는 태풍을 봐도 알겠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을 인간은 감당하기 어려웠고, 추위와 위험한 동물과의 대립에서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때 인간의 과학기술 행위가 등장합니다.

즉 인간의 과학기술은 자연으로부터 인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시작했고 역사 속에서 그 발전을 거듭합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고, 첨단 과학기술은 편리함을 넘어 인간 생명 연장 등 그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자연에 대한 인간의 과학기술 행위는 인간 생존을 위해 자연의 위협을 단순히 통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의 조작과 변형을 초래했고 그것이 오히려 인간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흔히들 “자연이 복수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연 앞에 인간을 지키고자 시작한 과학기술이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역으로 인간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환경윤리는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제라면, 환경윤리는 그 인간 자신에 대한 통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환경윤리를 다른 말로 과학기술윤리라고도 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말해 환경윤리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도덕적 관계에 대한 체계적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과학기술을 통해 관계를 맺는데 그 함수의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물음과 설명이 곧 환경윤리입니다.

결국 환경윤리의 역할은 환경정책과 과학기술 안에 감추어진 가치와 그와 연관된 가정(Hypothese)들의 의미를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윤리와 과학기술은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 속에 공존합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은 자연의 위협 속에 인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한한 물질적 진보라는 서구사상에 입각해, 계몽주의 이후 발전해 온 현대과학과 기술공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완전한 통제로 빈곤, 질병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믿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론 이러한 진보 이데올로기에 맞서, 그 허구성을 폭로하고 지구와 온 인류를 과학기술 문명의 폐해로부터 구하기 위해 우리네 삶의 형태와 문화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호소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략 두 가지 입장을 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적 발전과 진보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그 부정적 부산물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취할 유일한 진보와 가능성은 그러한 진보 사상 자체를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환경이론들이 도출됩니다. 첫 번째 입장을 우리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c) 환경윤리라고 칭합니다. 인간의 과학기술 행위는 그 본래의 의도가 선한 것인데, 인간의 무지와 탐욕이 지금의 환경파괴와 자연 훼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간만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자연은 인간 삶에 유용한 자원일 뿐이고, 어디까지나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한에서 그 가치가 인정됩니다. 이들은 인간과 관계없이 자연 그 자체에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생태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자연의 가치는 어디까지나 자연의 가치를 지각할 수 있는 인간의 주관적 능력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이들은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가 되는 전통 도덕철학의 원리를 견지하며 환경윤리를 자연과 환경문제에 기존의 윤리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철저한 응용윤리로 이해합니다. 즉 공리주의에 기초한 인간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자연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그간의 환경파괴를 야기한 인간의 탐욕의 자리에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대신합니다. 또한 그들은 정책적으로도 환경에 대해 잘 계몽된 엘리트 관료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 고려의 대상인가? 인간이 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인간 번영과 복지를 말하지만 그 끝없는 인간 탐욕과 소유욕이 절제될 수 있을까?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통제하는 현 시점에서 환경정책을 표방한 정책과 개발이 오히려 교묘히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비판어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입장은 생태학적 근본주의(Ecological Fundamentalism)입니다. 이들은 환경파괴와 생태학적 위기가 근본적으로 과학기술 문명에 깔려있는 인간중심주의에 근거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탈인간중심적 자연관 또는 생명철학을 정초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자연을 단순히 자원으로 보는 인간중심주의의 뿌리를 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 징후만 치료하다가는 장기적으로 환경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와 생태계 전반에 확장하고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혁명적 패러다임을 추구합니다. 생태학적 근본주의는 그 이론적 배경에 따라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폭이 달라집니다. 동물해방론(Animal Liberation)의 윤리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공리주의에 입각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의식적 경험을 가진 고등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생명 그 자체를 신성한 것으로(Ehrfurcht vor dem Leben), 폴 테일러(Paul Taylor)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고유의 선(자연적 목적추구 능력)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며 식물까지 도덕적 권리를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 대지윤리(Land ethics)의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는 지구 공동체 전반의 고유한 가치를 주장하며 인간과 대지의 상호의존관계를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 대지를 인간에게 속한 물건(Commodity)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이 대지에 속해 있는 공동체(Community)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급진적인 이론으로 사회생태학자(Social ecology)인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은 환경문제를 보다 큰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와 연계해 생각합니다. 인간의 계층구조와 지배에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가 시작됐고,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지배를 제거하지 않는 한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과 이주민을 점점 더 열대림으로 몰아내는 사회적, 경제적 빈곤을 개선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브라질의 열대림 파괴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문제를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해 왔던 역사적 관계에 근거해 조명합니다. 즉 여성과 자연에 대한 남성들의 착취와 지배는 역사적, 경험적, 상징적, 이론적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고, 이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여성주의와 환경윤리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수직보다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고 생명잉태를 경험한 여성성이 결국 환경문제를 치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학적 근본주의자들의 주장도 거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이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적이고 종교적 직관에 근거한 것은 아닌가? 어떻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들이 핵발전소, 댐, 쓰레기 매립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환경운동원을 그 엄청난 위험에 당당히 노출 시킬 수 있을까? 천성산 터널을 막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100을 금식한 지울 스님은 진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정말 자연과 환경이 인간이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가? 환경운동 하는 시민단체도 이익단체의 영향을 받으므로 결국 마찬가지로 아닌가? 두 가지 입장을 종합할 때, 인간중심주의가 환경위기의 뿌리가 됨은 확실합니다. 이들은 생태계의 심각성과 환경파괴의 형이상학적 배후를 인식하지 못하며 환경을 빗댄 허울 좋은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태학적 근본주의는 인간의 과학기술의 문화, 역사적 필연성을 깨닫지 못하고 과학기술이 자연을 지배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인간 자유의 또 다른 표현이고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임을 간과합니다. 결국 인간의 과학기술 행위가 끝내 지구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비판론도, 과학기술이 이 모든 환경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오늘 현 시점에서는 환경문제의 본질을 진단하지 못합니다. 환경문제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연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계됩니다. 좀 더 환경을 고려한 과학기술이 또는 환경정책을 꼼꼼히 심의하는 사람에게 맡긴다고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밀도 있게 고민할 때 환경문제의 근원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3. 녹색기술?

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대국이며, 연간 약 6억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합니다. 2013년이면 온실가스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지난 8.15 경축행사에서 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현 정부의 초기에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물가 및 민생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선언이 발표되었고, 곧 이어 즉흥적으로 나온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비판도 있지만, 친환경 산업에 대한 육성 방침은 반가운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등 친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온실가스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우리 미래의 신 성장 동력을 삼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을 뜻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에너지 자립을 65%까지 끌어올리는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만들고 이에 따른 일자리 95만을 신규창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석유 이후의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 에너지 정책을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한 예로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하는 에너지양(TOE)을 뜻하는 에너지단위를 현재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명박 대통령도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바로 녹색성장의 핵심”이며 “다른 산업의 기반 산업인 에너지산업의 그린화는 다른 산업의 그린화를 가져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성장 시스템은 녹색성장과는 피리가 큽니다. 에너지 소비가 큰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지배적이고 급증하는 자동차 연료 소비로 인해 지구 온난화 측면에서 친환경적이지 못한 국가로 취급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오염 정도보다 환경오염 감축 노력에 중점을 두는 환경지수에서도 2005년 142개국에서 136위를 차지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수송용 연료 사용증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미비, 국내 대체에너지 자원의 한계, 관련 기술 개발의 낙후 등 전반적 인프라는 사실상 취약합니다.

그럼 이런 바탕에서 어떻게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 되었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경축사 전문을 읽어보면 녹색성장이 수사학적 차원에서 도용되고 실은 양극화, 일자리부족, 민생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녹색무늬를 띤 경제성장이 강조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녹색성장이지만 해외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보장하기 위한 자원외교를 강조하고 있고, 더 나아가 지난 9월 현 20기 수준의 핵발전소를 2030년까지 40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볼 때, 녹색성장은 원자력 정책을 위한 사탕발림은 아닌지 가우뚱하게 됩니다. 마치 환경을 핑계로 청계천 복원이 추진됐지만 사실은 환경이 도심 경쟁력 회복이란 경제가치 구현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환경과 자연은 현 정부에게 여전히 돈이 되는 개발의 대상은 아닐지 의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와 석탄연료로 인한 인류의 심각한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인식보다, 모든 환경문제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동력 또는 일자리 창출 기회 정도로 국한시켜버리는 획일적인 경제 중심 사고관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발표한 녹색성장을 녹색이 아닌 회색을 띤 회색성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이 만들어질 기술, 즉 녹색기술은 앞 장에서 언급한 환경윤리의 이론 중에 어느 입장에 속해 있을까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도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경제를 만들겠다는 주장과 지구 온난화를 야기한 소비 중심의 현재 우리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단 한 줄의 반성도 없는 것을 볼 때, 분명 녹색성장의 동력인 녹색기술은 인간중심주의 환경윤리에 기초합니다. 자연은 어디까지나 자원이고 인간에게 기여함으로 그 가치가 부여되고, 환경을 파괴한 인간의 무지와 탐욕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민한 정책으로 대신하여 인간사회는 자연과 더불어 지속적 발전을 꾀할 것이라는 믿음이 녹색기술의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현 시대는 분명 과학기술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과학기술의 생산품인 물질적 편의수단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편지 대신 전화를, 걷는 대신에 자동차를 탑니다. 그렇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단순히 인간의 물질적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은 그 방법론의 기초가 되는 합리성을 수단으로 우리의 지성적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치적인 결단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의 조언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전문가들의 지식, 즉 과학기술은 정책수립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과학기술은 전통사회에서 종교가 담당했던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시대의 종교”라는 주장이 들립니다. 과학기술의 합리성을 실천적 규범으로 절대화하여 인간의 삶과 행위를 과학화하고자 하는 정치체계를 흔히 기술관료제라고 합니다. 기술관료제의 측면에서 인간의 삶은 단지 과학기술적 문제로만 파악되며,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언제나 연구개발에 있어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에 예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예측관계로 과학기술이 ‘사회화’되기도 하지만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심을 갖는 이해계급 또한 산출합니다. 여기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질문됩니다. 과연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이 과학기술의 효율성과 기능성으로 흡수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녹색기술을 개발하여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그린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녹색성장이라면, 그 안에는 경제에 예측된 과학기술의 합리성을 내세워 인간본연의 가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현대 과학의 맹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을 심의하고 전개해야 하는 정부가 생태학적 근본주의처럼 친환경을 위한 혁명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철학과 환경관이 배제된 ‘저탄소 녹색성장’에서는 경제를 위한 ‘토건적 환경관’만을 읽을 수 있을 뿐이며, 전 세계 선진국이 집중하고 있는 생태사회, 생태도시에 대한 진정한 고민은 있었는가 재차 의심하게 됩니다. 진정한 ‘녹색가치’의 깨달음은 결국 참된 인간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과학기술로 그리고 경제적 부유함만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확보되지 못한다는 단순한 진리에서 튼실한 녹색성장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녹색성장과 지역개발

녹색성장은 단순히 환경을 배려하거나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구조, 기업경영, 공공정책, 행정시스템 더 나아가 개인의 소비형태 까지 사회 전반이 친환경으로 재편되는 변화가 함께 동반될 때, 진정한 녹색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녹색기술을 통한 지역개발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계획과 통찰이 필요할까요? 어찌 보면 간단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간과한 부분을 실천 계획에 포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녹색성장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는 70년대처럼 국가주도의 중앙정부 집권식 일방적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없습니다.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녹색기술을 통한 녹색에너지로 새로운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시민의 지원과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발표가 있는 전, 후를 살펴볼 때, 이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거의 생략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 기업, 언론, 시민단체와 학계까지 전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요관리가 언급되지 않고 에너지 수요를 과다 예측한 공급을 전제로 녹색기술을 전개한다면 녹색성장은 조만간 한계에 부딪칠게 명백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환경위기의 심각성, 인간 삶의 가변성과 책임성을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깨우칠 때 이는 어떤 화려한 정책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에코(Eco)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에코시티, 에코폴리스, 에코산업 등 환경을 중시하는 곳에 에코라는 단어는 마치 마스코트처럼 등장합니다. 원리 생태학을 뜻하는 ‘Ecology’에서 유래한 말인데 다른 예를 들어 경제학도 ‘Economics’입니다. 에코라는 말은 그리스어 ‘Oikos’에서 나온 말인데 그 뜻은 집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생태학(Ecology)은 집의 학문이 되고, 경제학(Economics)은 집의 수를 의미합니다. 본래 집은 그냥 보기에 하나의 건물이지만 그곳에는 다양한 구성요소와 조화가 필요합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전기와 수도가 들어가고, 보안과 오물 처리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어야 진짜 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에코가 뜻하는 진정한 의미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녹색성장을 이루려면 견고하고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우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발표됐지만 엄청난 일을 끌고나갈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또한 언급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와 국토부가 제 각각인 행정 시스템에서는 과학기술의 최대장점인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방에서의 녹색성장은 환경정책을 우선으로 한 유연하고 섬세한 추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의 추진과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시스템으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갈 수 없으며, ‘저탄소 녹색성장’도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투적이지만 중앙정부와 차별화를 통해 지역개발의 진정한 녹색성장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유기농 산업이 현재의 대세이듯, 녹색소비자를 무시하는 기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경영 열풍이 대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글로벌 산업계의 최대 화두가 된지는 이미 오래 전 사실입니다. 뒤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SK, 포스코, 삼성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린 경영과 그린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탄소성적표시제 또는 탄소 캐쉬백의 실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생산과 소비를 녹색으로 칠하는 것입니다. 환경위기의 진정한 극복은 단순히 ‘저탄소 녹색성장’으로만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중앙의 정부와 대기업이 수익모델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삼아 환경을 들먹인다면, 이미 친환경에 익숙한 지방은 어려울지 모르나 진정한 생태철학과 환경윤리를 기반으로 한 녹색성장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기업에서 기업철학이나 기업윤리를 말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생태철학과 환경윤리에 깊이 뿌리내린 녹색성장은 그 가시적 효과는 느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환경을 이용해 돈벌이에 치중했던 곳과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를 것이 분명합니다. 환경윤리하면 대부분 쓰레기 버리지 말고, 자연보호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 것 등, 착한 국민 만드는 계몽으로 이해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환경윤리와 생태철학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이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더 나아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자연환경 앞에서 묻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 생활에서 아침에 대문을 열고 나와 다시 집에 들어갈 때까지 흙을 밟아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날씨를 살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하늘을 느끼기 위해 잠시라도 하늘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새만금에 바이오 식물을 경작하겠다는 말도 있지만, 녹색성장 에너지와 연관돼 지역개발의 알짜미 있기보단 오히려 자연 속에서 인간의 존재가치와 자존감을 회복하는 사업개발이 지역개발의 녹색성장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5. 결론 : 환경윤리에 기초한 지역개발

환경이란 말을 현 정부는 녹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녹색은 푸르른 생명을 의미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도 사실은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이 지구온난화를 불러왔고 곧 있을 기후협약의 제약 이전에 지속가능한 성장 에너지를 확보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녹색성장을 이룰 녹색기술의 개발이 우선인 것 같지만, 사실은 녹색운동이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변적이고 현학적으로 들리실지 모르나, 환경문제는 과학 기술로도 경제학으로도 풀 수 없으며 그럴싸한 정책적 구호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연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농촌에서 예민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에 관련해, 2005년 유엔 특별 조사단은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다수의 동물을 좁은 지역에 몰아넣고 기르는 축산방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농장의 닭은 복사 용지 A4 한 장 크기에서 움짱달짝 못하고, 컨베이어 벨트에 거꾸로 매달려 1분에 120마리가 도살됩니다. 닭은 인간과 비슷한 신경계를 지니고 있을뿐더러 감수성도 예민한 동물인데도 말입니다. 몇해 전 광우병으로 온 지구가 난리가 났을 때 현각스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업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소를 빨리 키우기 위해 먹이는 동물성 사료를 지적하시면서, 초식동물을 육식동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동료를 먹어버리는 괴물로 만들었으니 우리는 광우병이 와도 할 말이 없다고 말입니다.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한다면, 녹색기술 개발이 답이 아님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의 라이프스타일이 세계인구 6%로 전체 에너지의 30%를 소비하는 기막힌 현실을 초래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의 해결에는 우리네 인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혜안과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환경을 화두로 한 경제성장의 시작은 될 수 있으나 전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